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0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모(母)의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기본법 제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가족에 관한 기본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가족 구성원의 공동생활 형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딸에 대한 후견인 지위에 있었던 청구인으로부터 후견인 지위를 박탈함에 있어서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근거한 면밀한 형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형량 없이 후견인 지위를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가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사의 난민소송 불공정 우려로 인한 기피 헌법소원>은 독일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의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이 의심되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가톨릭 아동위탁지원기관의 종교행사의 자유>는 사적단체의 종교행사의 자유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설립된 사적단체가 그 교리에 맞는 방식으로 위탁부모인증 업무를 수행할 자유는 종교행사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사적 단체의 종교행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 주 투표규정의 인종차별금지 위반 여부>는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한 연방선거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선거권법은 선거권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15조를 보완하기 위해 1965년 제정된 연방법률로, 각 주에서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한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부정선거 방지라는 주의 이익은 매우 중대한데 반해, 문제된 애리조나 주 투표규정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그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가하는 부담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연방선거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임시체류권자의 가족결합권> 사건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부터 파생된 가족결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민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각국이 이민정책을 실시할 재량권을 가지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의 가족결합권과 공익 사이에 비례적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덴마크에서 임시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족결합권을 주장하기 위해 3년의 기간을 기다리도록 한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 부부동성제의 합헌성>은 부부가 같은 성(姓)을 쓰도록 한 민법 조항과,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으로 부부가 사용할 하나의 성(姓)을 정한 호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근(2021. 6. 23.) 결정입니다.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2015년에 14:1로 합헌 판결을 한 바 있지만, 소송 당사자들은 그 이후 사회 및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부부동성제가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조약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최고재판소의 법정의견은 2015년 판결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

다며 민법 조항과 호적법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국제조약 기준 등을 근거로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12:3 합헌).

일본 최고재판소의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특정 종교시설을 소유한 사단법인에 공원사용료를 면제한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이라도 동시에 역사적, 문화재적 건조물로 보호대상이 되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 보장 확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준에 따라 문제된 공원사용료 면제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일본 헌법 제20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알제리 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및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위 세계헌법재판기관들은 기존에 소개된 적이 있으나, 그간의 헌법 개정 또는 주요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알제리는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변경하고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치안 유지, 헌법적 가치의 충돌과 균형에 관한 논의>에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잦은 테러나 시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음에 따라 경찰권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자유를 지켜주는 포괄적 안전을 위한 법률' 조항들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사익의 형량을 통해,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나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본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미토지방재판소의 도카이 제2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운행 금지판결>은 일본 수도권 내의 발전용원자로시설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층방호'가 문제된 최근의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일본 법원은 발전용원자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피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발전소 운행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